인권정보자료실
Ma1.23

긴급토론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장소 : 대한성공회 성당 프란치스코홀
- 일시 : 2003년 11월 20일(목) 오후 2시

<순서 및 식순>

○ 사회 : 최의팔(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외노공대위 공동대표)
○ 토론
▶ 시민사회단체
-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 실장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중소기업주
▶ 농성투쟁단
- 뚜라(농성투쟁단 공동대표)
- 박석운(외노공대위 집행위원장)
- 김해성(중국동포의집 대표)
- 임광빈(조선족복지선교센터, 백주년기념회관 농성단)
- 이영(남양주 샬롬의집)
- 고은영(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 김경태(대구외국인노동자의집)
- 이철승(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 이주노동자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외노공대위 농성투쟁단
Tel: 02-747-6830, Fax: 02-747-6832 / ejunodong@chol.com

인권정보자료실
Ma1.23

<자료집 목차>

○ 토론문 및 자료

: 강제추방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

: 정부의 불법체류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의팔 외노협 상임대표/외노공대위 공동대표/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 갈팡질팡 노동부를 규탄한다(박천응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원칙 무너진 불법체류자 단속 (설동훈 전북대 교수, 문화일보 11월 18일자 포럼)

○ 11월 16일,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사면양성화를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 중소기업주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11월 13일)

: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반월 시화공단업주를 대표해서

○ 이주노동자 성명서

: [스리랑카 공동체, 스리랑카 독립협회(Sri-Lanka United Independence Association, SLUIA) 성명서]

: [방글라데시노동자복지협의회(Bangladesh Workers' Welfare Associaion) 성명서]

○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모음(11월 13일~11월 19일)

강제추방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 집행위원장)

1. 현황

* 법무부 합법화 처리 실적
  : 합법화 대상자 227,757명, 노동부접수자 189,615명
  : 법무부 신고자 169,599명
  : 노동부 신고자 중 20,016명이 법무부 미신고, 그중 취업알선 못받은 자 4,455명이 포함

* 약 10만명의 강제추방 대상자가 존재함.
  : 4년이상자 7만여명
  : 4년미만자 중 미신고자 3만7천명
  : 밀입국자 등 기타 1만명
  : 11월15일까지 자진출국자 23,441명
  : 약 9만5천-10만명 선의 강제추방 대상자

* 정부의 단속 동향
  : 50개 단속 전담반(1개 팀당 15명 정도)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단속 진행
  - 법무부, 경찰, 해양경찰청이 단속 실시, 노동부와 중기청은 계도활동,
  - 역 등지에서 검문, 확인 후 연행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중소제조업 사업장에는 들어 가지 않고 있음.

* 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동향
  : 일부 잠적, 관망
  : 중소 제조업 사업장 : 상당수가 해고되었다가 그중 일정 숫자가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초기 단속않는다는 언론 보도 보고나서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중
  :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경우는 다수 해고, 일부는 계속 근무
  : 전국 각지에서 농성 투쟁중
    서울(성공회성당, 명동성당, 100주년기념관), 창원, 진천, 마석, 안산, 대구 등)
  : 조선족교회의 경우는 재외동포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

2. 문제점

* 외국의 추세와 역행

: 외국에서 사면/양성화할 때 모두 장기체류자를 우선적으로 사면/양성화시켜 왔음.

: 그 사회에의 적응성이나 언어 소통성, 기술 숙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임.

* 중소영세기업의 인력운영에 악영향

: 당장 기계 세우는 사업장 다수 발생함

: 초기에는 중소제조업 단속 않으니까 심각성이 덜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는 바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일시적으로 묵인하겠다는 뜻임. 그런데

: 어차피 외국인이주노동력을 활용할 바에는 기술숙련도가 높고, 당해 기업에의 정착성이 높고, 언어 소통성이 훨씬 좋은 4년이상된 이주노동력을 계속 스게 하는 것이 기업에게 훨씬 유리함

* 새 제도 정착에 결정적인 악영향이 끼쳐짐

: 결국 전체 이주노동력의 25-30% 수준의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력이 잔존하게 되어 결국 새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제점이 사실상 그대로(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게 됨

: 강력 단속으로 10%대 이하로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임.

-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임.

* 부족인력을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여오는 방안을 말하고 있지만

: 입국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한 입국하고서도 그 사람들이 한국사회나 그 사업장에 적응하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음.

* 부족인력을 연수생으로 채우는 방안을 말하기도 하지만

: 연수제도는 체류는 합법이지만 취업은 불법인 편법적 제도이고 문명국가에서 편법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움

: 시간 걸리고 적응 비용이 소요되는 점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신규 도입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됨.

: 연수생 제도는 저임금체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업장 이탈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 타업종에 취업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에 취업하게 되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현재 4,500명 정도가 취업알선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체 10만명에 비교하면 절대숫자가 부족함. 이 방안으로 해결되지 않음.

: 결국 미등록 상태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됨.

: 강력 단속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들이 견디기 어렵게 되거나 단속이

형식화되어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가 상당수 잔존하게 됨.

* 정주화현상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함.

: 장기체류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리 정주화를 막는 정책을 쓰더라도 필연적으로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현상은 자연적 현상이 될 것임.

: 정주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현실적합성이 없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 일부 정주화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나 분제점을 미리 해소해 나가는 정책을 쓰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 더욱이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생각하면 어차피 부족한 인력을 이주노동력으로 채우는 방법이 불가피함. 그렇다면 이왕 이주노동력을 사용한다면 이미 검증되고 한국사회에 적응력이 높은 사람들 4년이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

* 아울러 이주노동력을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화하는 정책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어느모로 보나 4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조치는 성공하기 어려움.

3. 해결방안

* 제1안

: 4년 이상자들을 전원 사면/합법화, 출국 여부를 선택적으로 하여 사면/합법화하는 방안이 있다.

* 제2안

: 4년 이상자들을 3-4년 체류자와 같이 비자발급을 보장하여 한번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게 하는 방안

: 이 경우 한번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출구하기 어려운 미안마 등과 같은 나라는 특례가 필요함.

: 다시 입국할 때 브로커나 수속시 비리가 끼어들지 않도록 입체적 감시활동이 필요함.

* 제3안

: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일단 출국하지만 내년 8월이후 고용허가제 실시할 때 확실한 우선권을 주는 방안

: 이 경우도 MOU를 체결하지 않을 나라들에 대한 특례가 있어야 함.

정부의 불법체류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의팔(외노협 상임대표/외노공대위 공동대표/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정부의 불법체류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는 지난 9월 초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 시행을 발표하면서 오는 11월 17일부터 불법체류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을 강력히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자진출국신고기간이 끝난 16일에도 법무부는 17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5 0개 전담반을 편성,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 12만 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애초의 단속방침을 대폭 축소해서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내년 6월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중국동포는 동포법 개정문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를 보면서 시행도 해보지 못하면서 정책을 바꾸는, 우리같이 비전문가도 예측할 수 있는 사태를 무시한 무책임한 정책입안자들에게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달에 법무부장관 초청 전문가 좌담회에서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이번에는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자진출국유예기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어떤 일이 있더라고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러한 강제단속이 시행될 수 없는 근거를 대면서 금번에는 '정책실명제'를 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 경우 그 정책입안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제안까지 했었다. 아무리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번에는 예년의 것들과 달리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것이니 자진출국을 해야 한다고 설득해도 이주노동자들은 강력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언했었다. 그들의 단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나? 정부의 발표를 믿고 출국한 이들만 어리석게 되고, 강력단속을 믿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을 권유한 것이 거짓말쟁이 되고,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어기는 이들만 혜택(?)을 입는 현실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라고 본다. 법무부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잇따른 무단이탈로 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중소제조업체의 호소에 따른 것"이라 며 "중소제조업종에는 단속반을 투입하지 않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중소기업이 그렇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인력정책을 세울 때에는 무엇보다도 충분히 경제적 현실을 파악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10여만 명을 강제추방을 시켜야 할 위치에서 이주노동자강제단속, 기업주 처벌이라는 지극히 안일한 태도로만 대처해서 이런 법률 경시풍조라는 사태를 가져왔다고 본다.

이렇게 강제추방정책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무부 직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현실적인 종합적 외국인력 정책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강제추방은 금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다면, 인력공황은 당연히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혀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국에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자진출국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전체 불법체류자의 거의 반수인 12여 만 명을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다는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인가? 그러한 결과로 지난 주 두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금처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내년 6월까지 단속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강제출국이라는 위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서 제대로의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4년 이상된 숙련공을 내보내고 모든 면에서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다시 도입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야 하는가? 또한 수용시설도 없으면서 10여 만 명을 어떻게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을까? 수용시설을 새로 짓는다거나 체포인력을 증가하는 것에는 얼마나 재정이 들어야 하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은 자진출국정책을 유도하도록 하고 단속에 드는 재정을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금번 강제출국정책이 실패했다고 겸허하게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그에 상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번 강제추방정책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인구증감 추세,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 그에 따른 인력정책,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이웃나라들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공생사회를 향해 지평선을 넓히면서 그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실행해야 될 것이다.

1)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은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 세워 실패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이주노동자 정책은 우선적으로 현재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다.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현재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인 수혜대상으로 하는데, 새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의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이번 법은 새로 도입되는 이주노동자에게 중심을 두어 마련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불법체류자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다. 불법체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를 전원 사면해서 합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

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당이 야당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 장기체류자에게 더 혜택을 주도록 하거나 최소한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단기체류자보다는 장기체류자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고 있다. 이주자에게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장기 불법체류자에게는 일정 정도 신고를 받아 타당성 여부를 거쳐 이들에게 영주비자를 주고 있으며, 독일에 간 우리의 광부나 간호원들도 6년 이상 지났을 때 특별 체류비자를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장기체류자들이 더 그 나라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영세기업들은 장기체류자들이이미 한국문화와 언어, 그리고 기술이 익숙하여 노동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체류자를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은 거꾸로 새로 도입되는 이주노동자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대체적으로 탁상공론식을 계산해서 4년 이상된 자들은 그 동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고 3년 미만인 자들은 송출비리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니 인도적 차원에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한을 정했다. 원론적으로 불법체류자는 모두 체류에 관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출국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3년 미만은 나가야 되고 4년 이상은 출국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가? 이러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실제로 맞지 않는다. 4년 이상된 자들도 IMF로 인해 장기 실업상태에 놓였던 자들도 적지 않고,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돈을 벌어놓지 못한 이주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때로 질병으로 인해 오히려 빚을 진 자들도 있다. 따라서 이런 가설적인 기한 설정보다는 법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3) 단속 유예와 같은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법무부에서 하는 식으로 '한시적 단속 유예'와 같은 어정쩡한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하고 귀국 약속을 받는' 명확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작년 3월 불법 체류 자진신고를 접수한 이후,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미 1년 반의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기간을 '강제 출국 기한'의 무원칙한 연장으로 받아들였을 뿐, 자신들의 출국 준비와 연계하여 생각지 않았다. 지금 이대로 한다면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후,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단속유예가 끝날 내년 6월에 또다시 현재와 같은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높다.

4) 자진출국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금번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4년 이상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자진 출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가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만 출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이들은 단속을 당해서 강제로 출국될 때까지 숨어서라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업주들도 이들이 기술도 익혔고 한국말도 잘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해서 본인들이 책임질 터이니 출국하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충동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들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고용주나 한국경제를 감안하여 재입국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들은 자진출국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초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 고용허가제에서 특별 대상으로 삼는 방안, MOU 체결에서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재외 동포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재외동포법이 금년 말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지금 제출하려고 하는 개정안은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 역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동포들에게도 불법 체류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되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재외동포는 고용허가제(취업관리제)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또한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에게 불법체류 여부를 문제 삼지 말고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다민족 공생사회를 지양하는 종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번 불법체류자 정부대책의 밑바닥에는 단일민족, 혈통보존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을 1년씩 재계약하여 총 3년에 기한을 정한 것이라든지, 또는 3년 이하의 불법체류자에게 최장 5년까지 체류를 연장한 것, 그리고 4년 이상 불법체류자를 강제 귀국시키려고 하는 것 등이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6백만 명이 우리 동포가 나가 살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점점 더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하게 기능실습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다민족공생사회'라는 화두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노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캐나다와 호주의 '복합문화주의'를 예시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좀더 가슴을 열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화는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 "국가 단위의 경제 공동체 개념이 이제는 화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한국사회도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돼 살아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도 자유롭게 이동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면서 한국인과 더불어 함께 차별없이 살 그 날을 향하여 다민족 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종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갈팡질팡 노동부를 규탄한다

박천응 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고용허가제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비틀거리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부서이다. 강제추방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가 정착 될 것이란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노동부는 현재 기업의 인력난을 애써 부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불법체류자 단속문제 까지 개입하는 월권을 서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실정과 노동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노동행정은 비판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라는 자기 고유 임무에 충실하게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신없는 노동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 발상에 분통터지는 일이 일어났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003년 11월 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였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국내를 떠날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종 등에서 인력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가 있지만 '인력부족 현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제조업의 인력부족을, 취업관리제를 통하여 재중 동포가 서비스업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을 채워다간다면 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다. 중소기업은 현재 인력문제로 아우성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가 단속을 피하여 숨어지내야 하는 현실이다. 공장 문을 닫은 기업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인력부족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산업현장과 노동현장을 발로 돌아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통계로 본 책상머리 정책이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가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강화를 조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산업기술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장섰던 부서이다. 고용허가제가 정상적으로 정착되려면 신속하게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폐지되고,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불법체류자가 최소화 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가 연착륙 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여나가는 문제가 급한 현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에 실무 책임을 맡았던 담당 노동부 고위 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문제가 불거지자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제조업의 인력부족을, 취업관리제를 통하여 재중동포가 서비스업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을 채워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산업기술연수제도 강화와 재중동포법 개정이 지연되어도 좋다'는 사고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한심한 발상은 지금까지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배격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노예사냥에 앞장서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이든 합법체류자이든 근로자로서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일이 주 업무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부 5개 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반에 합류하여 외국인노동자 단속에 나갈 채비까지 한 일이 있다. 특히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파파라치식 '신고포상제'의 시행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 노예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용역회사를 동원한 단속 등의 소문 (매일경제 2003,11,13) 등에 과한 기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포상제 정책을 입안한 노동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노동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노동부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고용하가제 문제로 정신이 없을 때 이미 지난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산업기술연수생이 31,727명이 입국하였다. 이러한 형국에서 고용허가제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앞장서서 산업기술연수생을 서둘러 추가 도입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오히려 노동부는 산업기술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은 편법제도 임을 지적하고 외국인노동자 정책이 정상을 찾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송출비리와 구조적인 불법체류 원인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강화에 노동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강제추방 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가능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허가제의 틀로 끌어안아야 할 것이다. 실패할 강제추방정책이 아닌 유연성 있는 포용의 노동정책으로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정책안이 있다 하더라고 실현 불가능 한 정책이라면 속히 수정하여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다. 노동부 스스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반성하고 고용허가제의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포럼>
원칙 무너진 불법체류자 단속

정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일제 단속이 시작 단계부터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주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이탈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추방 위기에 내몰린 중국 동포들은 집단적 국적 회복 신청과 단식 농성으로 맞섰다.

거센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고, 국적 회복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정리될 때까지 중국 동포 불법 체류자의 단속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 비제조업에 취업중인 4년 이상 불법 체류자 순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중소 제조업체에 나타나기보다는 여전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중소 제조업체도 그들을 마음 놓고 고용하지 못한다. 엄정 단속을 강조하던 정부가 급작스레 내놓은 조치이니 그렇다.

중국 동포도 사업체를 옮긴 노동자들은 단속 대상에 들기 때문에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한시적으로' 취해진 정부의 임시방편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성중인 중국 동포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임시방편 조치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짙다. 도시의 다락방·지하실, 농촌의 폐가 등에 숨어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일제 단속 기간이 끝나면 전처럼 불법 체류자가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내년 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는 불법 체류자와 그 고용업체 단속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힘들더라도 올해 겨울을 숨어 지내려 한다. 그들은 이러한 임시방편 조치에서 과거 16차례 솜방망이 단속 경험을 떠올리며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기존 불법 체류자를 없애지 않은 채,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그들 역시 불법 체류

자로 잔류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 해소 방안은 단속에 의한 강제추방보다는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일관된 정책 의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인(誘因)과 강제(强制)를 모두 동원하되, 편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

첫째, 유인을 제공하려면, '한시적 단속 유예'와 같은 어정쩡한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하고 귀국 약속을 받는' 명확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작년 3월 불법 체류 자진신고를 접수한 이후,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미 1년 반의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기간을 '강제 출국 기한'의 무원칙한 연장으로 받아들였을 뿐, 자신들의 출국 준비와 연계하여 생각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 동포들에게도 불법 체류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방문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재외동포는 고용허가제(취업관리제)에 의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그들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해야 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할 경우 정부는 '불법 체류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자진 신고 기간중 출국자와 차등을 두기 위해 '재입국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늦게 출국한 사유가 합당한 경우, 그에게 가해지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유인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엄격한 단속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 사업체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펴야 한다. 외국인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고, 불법 체류자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불법 체류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에서 아무리 오래 버티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만 불법 체류자들이 제 발로 출국할 것이다.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 교수

기사 게재 일자 2003/11/18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정부는 또다시 미등록노동자 문제를 강제추방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그간 수없이 실시했던 단속과 강제추방이 증명하듯이 이는 전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금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한국정부는 현재 미등록노동자들을 체류기간으로 나누어 4년 미만 체류자에게는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4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게는 무조건 출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기한 내에 자진출국하지 않는 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당장 17일부터 살인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스리랑카 노동자 다라카 씨와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꾸 씨가 단속과 강제추방의 벼랑 끝에 떠밀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두 노동자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러온 '구조적 타살'이다. 한국 정부의 잘못된 강제추방 정책이 두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두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서도 성에 차지 않는지 전국에 50개 단속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려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 또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속만을 내세울 경우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수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직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목을 계속 조였고, 결국 그 모든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 몰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해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랜 동안 한국 사회를 위해 땀 흘려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새로운 인력을 들여오겠다는 정부의 비열한 '토사구팽'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을 은닉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 동안 미등록노동자들의 성실한 노동에 기대어 평안을 얻었던 모든 한국인들은 정부의 위협이 무서워 오랜 친구들을 단속의 칼바람 속으로 내 몰아야 할 판이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도 모자라 모든 국민을 '양심불량'이라는 구덩이에 쓸어 넣을 판인가?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나서서 이 비열한 처사를 규탄할 것이다. 양심 있는 모든 세력은 문을 열어 단속에 쫓기는 미등록노동자를 보호하고 은닉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모든 양심세력을 잡아 가두고 엄단하라. 세계의 양심이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금일 한국 정부에 강제추방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의 양심세력이 함께 하는 이 농성은 모든 이주노동자가 합법화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투쟁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하나.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3년 11월 16일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중소기업주가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노무현 대통령님께,

경기도 C공단에서 환경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H산업 대표입니다. 본사는 개업후 5년이 되었으며 개업이후 줄곧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생산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외국인노동자의 국가적 관리의 일환으로 단속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시행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고용주로서 상당히 불안함과 갈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조치(11월 15일한 4년이상 외국인 강제출국 및 고용중의 벌금, 징역부과)를 맞아 어려운 경기상황과 함께 또 하나의 사업영위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 매스컴에서 실업율 상승과 노숙자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들의 취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이끌어 가는 인력은 3-4 이상 체류 외국인노동자와 그 업주들입니다.

오히려 3-4년이하 체류외국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상호문화의 이해차이에서 오는 갈등, 언어폭력, 불량품의 양산, 안전사고등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상 3-4년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러한 갈등 해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소기업의 경우 생산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4년 8월 15일 이후 실시되는 고용허가제는 9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규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 연어이 필리핀, 태국, 중국동포, 방글라데시, 중국인등이 잇달아 들어옴 - 결국 불법노동자로 전락하는 수순이 되풀이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리라 봅니다.

이들의 계약된 직장에서의 이탈과 불법화는 3D업종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주들의 회유와 조금이라도 더 고임금을 갖기 위한 외국인노동자와의 이해가 맞물려 가는 현실에서 명약관화한 예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의 대부분을 외국노동자들에 의존해야하는 소기업은 (특히3D업종) 11월 16일부터 10개월간 공장의 가동을 멈추라는 것인지요.

IT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및 동남아의 허브기지화는 튼시한 중소기업과 3D의 제조업이 그 저변에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언젠가는 취해져야할 조치일 수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너무 편의적이었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히 제안하건데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노동자의 전원을 합법화시키고 고용허가제는

보류되어야 합니다. 합법화에 따라 정상적인 납세제도(갑근세 등)와 보험혜택 및 사후관리제도가 실행된 후 부족인원의 보충 등을 고용허가제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번조치로 우리 소기업의 대표들은 공장의 해외이전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진정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10개월을 버텨 고용허가제가 제도화되더라도 소기업까지 배정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10여년간의 전례가 그러했으니까요. 떳떳하고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이상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의 시각에서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제언드리며 만시지탄이나 사후실행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앙망하는 바입니다.

2003년 11월 13일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반월 시화공단업주를 대표해서

[스리랑카 공동체, 스리랑카 독립협회(Sri-Lanka United Independence Association, SLUIA) 성명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다아라끄를 대변하여

2003년 11월 11일 오후 7시 28분, 단대오거리 지하철역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다아라끄가 투신자살을 했다.

우리의 친구는 죽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 남아있는 스리랑카 공동체의 일원들은 강제추방이라는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달부터 대한민국의 정부는 4년이상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본국에 돌아갈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의 친구 다아라끄는 이러한 대한민국정책에 대한 희생 양이다.

대한민국의 강제추방 정책 때문에 중소기업주들은 15일까지 회사를 나가라고 종용하며 우리의 친구들은 강제로 해고당하고 있다.

해고당한 외국인노동자는 돈이 없어 비행기표를 사지도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남고 있다.

대한민국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돈을 많이 벌고자 찾아 왔던 우리 스리랑카노동자들의 마음은 이미 고인이 된 다아라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아라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심히 애통하고 있다.

우리 스리랑카 공동체는 제이, 제삼의 다아라끄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강제추방의 희생양이 나온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에 우리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에서 친구들과 함께 농성에 들어간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2003년 11월 12일 밤 9:00시
스리랑카 공동체
스리랑카 독립협회(Sri-Lanka United Independence Association, SLUIA)

[방글라데시노동자복지협의회(Bangladesh Workers' Welfare Associaion) 성명서]

조의를 표하며 : 죽음이 더 이상 있으면 안된다!

우리의 상태는 이동의 자유도 없고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다. 강제추방 앞에 심히 두렵고, 무척 힘들다.

우리의 상태는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화 조치의 차별때문이다.

4년이상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비자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외국인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4년이상 체류자들이 많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노동비자를 주지 않는 정책은 무슨 정책인가?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두 친구가 자살을 했다.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자식들을 버리고 자살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강제추방 조치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법화조치를 하려면 모두에게 실시해야지 무엇을 근거로 년수로 차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외국인노동자를 살리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살리기 위해 4년이상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비자를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경제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2003년 11월 13일 13시
방글라데시노동자복지협의회(Bangladesh Workers' Welfare Associaion)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조치 즉각 중단하라!

한국인노동자들이 연이어 자결한데 이어 외국인이주노동자들도 연이어 자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저녁 성남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치란 다라카(31세, 7년간 한국체류)씨가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날인 12일에는 김포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네팔 리톤(34세, 8년간 한국체류)씨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결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는 11월 16일부터 실시될 정부의 다속과 강제추방에 대한 심한 압박감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역만리 한국에 돈벌러 왔다가 강제추방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른 두 분 이주노동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정을 표합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설정한 강제추방 예정일을 불과 4-5일 앞두고 벌어진 이 참혹한 상황에 대해 우리들 이주노동자들고 상담, 지원단체들은 비통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죽음이 비록 자살의 외관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잘못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불러온 "구조적 타살"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의 사태는 평지돌출이 아니라 이미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강력단속과 엄벌을 강조하던 때부터 다속을 피해 오갈데 없어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수차 경고하여 왔습니다. 또하느 한국의 미등록(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 문제가 애초 외국인력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지 않고 편법으로만 일관한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니만큼, 한국정부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실시하면서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최선의 방안임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우리드르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였고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기준을 들이대면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일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모두 강제추방하겠다는 위협만 반복하였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경고는 불행히도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은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만일 정부당국이 강제추방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제2의 다라카와 리톤, 제3의 다라카와 리톤이 속출할 위험이 현존합니다.

우리들은 연이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다름아닌 바로 한국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기껏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서 4년이라는 극히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는, 한국에서 4년 이상 장기체류한 노동자들을 모두 강제추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결구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을 사면·양성화시킬 때 장기체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사면·양성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정부만 이와

정반대로 4년 이상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강제추방하는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쳐왔던 한국의 숨은 일꾼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전며합법화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기조로 요구합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지금이라도 강제추방조치를 철회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그것만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주장
1.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조치 철회하라!
2. 한국의 숨은 일꾼들이다. 미등록(불법체류)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3년 11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자강제추방반대ㆍ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정책을 반대한다!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인 스리랑카 출신 다라카(31)씨와 방글라데시 출신 리톤(34)씨가'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왔다가 꿈도 이루지 못한채 젊은 나이에 이국땅에서 고단한 삶을 마감했다.

우리는 이들의 자살이 정부가 4년이상 체류자를 11월 16일부터 단속을 통해 강제출국시키겠다는 정책에 큰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결과임을 밝혀둔다.
강제출국대상인 12만여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오는 16일 강제출국일을 '인간사냥의 날'로 부르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비인도적인 정책인지를 쉽게 알수 있다.

법무부는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고, 합동단속은 법무부 주관으로 노동부, 중기청, 경찰,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50개 전담반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합법화 등록을 마치지 않은 불법체류자 12만여명 이라고 밝힌바 있다.

오늘은 33년전 젊은 노동자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다'며 분신한 날이기도 하다. 33년이 지난 오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들어온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기계처럼 사용하다가 이제는 제2의 전태일로 만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젊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먼 이국땅에서 차디찬 주검이 되어 본국에 송환되었을 때 가슴 아파할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소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4년 이상된 외국인노동자 12만여명을 전원 합법화하는 것이 지혜로운 정책임을 재차 밝히고자 한다.

4년이상 체류자들은 한국말에 능통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고, 기술도 숙련되어 있고,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중소업체들도 이들을 계속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와 외국인이주노동자, 정부와 한국경제가 모두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비현실적인 강제단속과 추방을 중지하고 이들의 체류를 전원 합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1. 13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조치 중지하라

지난 11월 11일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와 11월 12일 네팔 출신 노동자가 죽었다.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나누어 강제출국 방침을 세우고 11월 17일부터 4년이상된 미등록노동자 강제추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4년이 넘는 강제출국대상자인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들의 죽음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근로자고용에관한법'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미흡한 제도와 조치였다.

현재 4년이상의 이주노동자는 12만명으로 이들을 전부 출국시키겠다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인권국가에서 미등록노동자의 체류문제를 무조건 강제출국으로 해결하려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해야 하며, 그때까지 강제추방 조치를 즉각 중지해야한다.

새사회연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11월 13일

새 사 회 연 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기 독 교 연 대 인 권 위 원 회 부 설
MIGRANT WORKER'S COUNSEL OFFICE GYOUNGNAM
641-846 경남 창원시 팔용동 17-11번지 http://kmc.jinbo.net/ TEL (055) 2.7.7.8.7.7.9 Fax (055) 2.7.7.8.7.4.4

성명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조치 결사 반대한다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강제추방 조치를 앞두고 초과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 속에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40여만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연수생제도'라는 편법적인 외국인력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 그나마 지난 7월 국회가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였지만, 이 또한 '고용허가제와 연수생제도 병행실시 및 불법체류자 선별적 합법화 조치'라는 졸속적인 내용을 담은 반쪽짜리 입법이었을 뿐이다.

때문에 우리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졸속입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합리적인 행정대책을 세워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강제추방'이라는 처방 뿐이다.

도대체 지난 10여년간 이주노동자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강제추방을 운운하는가?

4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IMF시절 고작 30~40만원 월급에 12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피땀흘린 이들이다. 그간 사람 대접도 못 받으면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제라도 등 두드려 격려해 줘도 부족한 마당에, 합동단속을 통해 강제로 추방시키겠다고 하니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다. 금년 4월 이후 초과체류자가 된 연수생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애처롭다. 하루라도 더 연수생으로 일한 것이 무슨 죄라고 강제추방하겠다는 것인가? 체불된 임금이 2,000만원 이하인 이주노동자들도 강제추방 대상이다. 2,000만원 이하는 돈도 아니라는 것인가?

한국 정부에 묻고 싶다. 도대체 강제추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2~14만명에 이르는 초과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해 업체를 이탈하여 숨어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러잖아도 일손이 모자라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법무부 · 노동부 · 중기청 · 경찰 · 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전국 50개 전담반을 편성, 대대적 단속을 감행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력공백이 가져올 민생치안업무 손실과 경비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단속이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토끼몰이식 인간사냥이 불러올 수많은 인명, 인권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잡힌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당했을 때 그들이 한국에 대해 무어라 말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주노동자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어울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에 강제추방

을 앞두고 자살까지 해야만 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며, 본 상담소는 40여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목놓아 한국사회에 부르짖는다.

1. 한국정부는 초과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 한국정부는 초과체류자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 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11월 14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및 강제추방조치 즉각철회를 촉구하는 항의농성자 일동

<성명서>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조치 즉각 중단하라!

최근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월11일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치란 다라카씨가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2일에는 김포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네팔 리톤씨가 스스로 목매달아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11월16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한 심한 압박감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역만리 한국에 돈벌러 왔다가, 강제추방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두분 이주노동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왕생극락의 천도를 발원합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설정한 강제추방 예정일을 앞두고 벌어진 이 참혹한 상황에 대해 우리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과 원불교인권위원회는 비통함과 분노의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죽음이 비록 자살의 외관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잘못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불러 온"구조적 타살"과 다름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강력단속과 엄벌을 강조하던 때부터 단속을 피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수차 경고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불법체류이주노동자 문제가 외국인력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지 않고 편법으로만 일관한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니만큼, 한국정부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든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에 뜻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원단체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년 이상 체류자들은 모두 강제추방하겠다는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불행히도 이주노동자가 생명을 버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만일 정부당국이 강제추방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더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연이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한국정부는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술도 익히고 한국생활도 익숙해진 4년 이상 장기체류한 노동자들을 모두 강제추방하겠다고 한 것은 대상 이주노동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불안을 안겨주어 결국 이들은 죽음의 길을 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쳐왔던 한국의 숨은 일꾼들이며 현재 한국의 영세 및 중소기업과 제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인력입니다. 이들에게는 전면합법화를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합리성이 결여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조치 철회하라!
1.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길을 열어주라!

2003년 11월 17일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분쇄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에 즈음한 기자회견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이 땅,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천형(天刑)인가!

이 땅에서는 자신의 한 몸을 팔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에게 한 줌의 소금과 한 뼘의 햇살마저도 있을 수 없단 말인가. 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손배가압류,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갈수록 힘들어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5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죽음 바쳤다.

노동자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천부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이 땅의 슬픔은 비단 한국 노동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숨 바쳐 투쟁한 열사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분노하고 투쟁하는 이 시각 · 이 장소에서 똑같은 이유로 또 다른 죽음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11월 11일 오후 7시28분, 경기도 성남시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전동차가 진입하는 순간 스리랑카 노동자 치란 다라카(Chiran Tharaka.31)씨가 선로로 뛰어내렸다. 다라카씨는 1996년 1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로 일해왔다.

또한, 11월 12일 오전 7시45분, 경기도 김포시 한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 네팔 비꾸씨가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어 목매 숨겼다. 1996년 11월 입국한 비꾸씨 역시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였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와 자본은 지난 십 수년 동안 이주 노동자의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 산업 연수생이라는 현대판 노예제를 통해, 그리고 노동권의 가장 기본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 선택의 자유도 없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와 자본은 이주 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해 왔다.

그리고 그런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4년 이상 체류한 13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모두 강제추방하는 인간사냥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11월 17일 오늘 이후부터 시작될 인간사냥과 강제 추방정책이 이 두 명의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며, 결국, 두 명의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와 자본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투쟁만이 살길이다.

40만의 이주 노동자는 말하고 있다. 한국에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돈벌기 위해 왔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이 좋고 한국에서 살고싶다고, 그리고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강제추방 앞에서 투쟁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투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에게 국적은 더 이상 없다. 노동탄압과 손배가압류와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한국 노동자와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의 족쇄에 묶인 이주노동자에게 차이란 없다. 그렇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중단시키고,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아닌 진실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40만 이주노동자와 1,300만 한국 노동자는 하나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제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대책기구를 제안하고 결성하여 향후의 이주노동자 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지지엄호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주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박살내자!
야만적인 인간사냥 자행하는 출입국 관리소 박살내자!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40만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쟁취하자!
이주 노동자 한국 노동자 하나되어 노동권을 쟁취하자!
폭력적인 노동탄압 중단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2003년 11월 17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성서공단 노동조합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법무부, 중기청, 경찰 등 5개 기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추산으로도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단기간에 이들을 단속, 수용하였다가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사냥'에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 방침이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년 이상 체류하였던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 때문에 불법체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산재보상도, 체불된 임금도, 전세 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였고 입국과정에서 진 큰 빚을 갚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당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신분을 감내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의 밑바닥을 지탱해왔던 이들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 추방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을 법적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잘못된 조치이며, 그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반인권 범죄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다.

지난 7월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노동등에관한법률'은 신판 노예제도라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온존시킨 위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 법률은 저임금 노동자를 해외에서 순환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의 법률적인 표현일 뿐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추세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법률의 개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강제 추방에 반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며, 그 동안 정부의 이주 노동자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몸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강제 추방을 위한 반인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적으로 합법화함으로서 그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

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강제 추방을 위한 단속 과정과 수용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년 11월 19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이상 27개단체)